

가구소득 및 거주형태와 자녀출산

-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가구소득과 거주형태가 자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월세에 비해 전세에 거주하는 여성의 첫째자녀출산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발견을 보고함

- 이러한 발견은 저출산정책과 관련하여 월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보다 안정된 형태인 전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보다 강도 높게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함

1. 연구 배경 및 목적

- 한국사회는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0으로 떨어지고 이후 꾸준히 1.30 이상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됨(www.kosis.kr).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과 평균수명의 증가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환기시킴
-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도입하여 초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현상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바탕으로 설립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계획을 마련, 2020년까지 3차에 걸친 시행계획을 구성하였으며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1차 기본계획 시행을 완료하고 2011년부터 제2차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음¹⁾
-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기본계획의 특징 중 하나는 임신 후 출산시기까지의 비용이나 출산 후 자녀양육비용을 낮춤으로써 출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이 설정되었다는 것임
 - 예를 들어, 2012년 7월부터 임신 당 최고 70만원을 지원하는 고운맘카드 제도와 보육시설 이용 시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보육수당 보조는 이러한 정책기조를 반영하는 것임
 - 이러한 정책방향은 자녀 출산에 대한 사후 보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향후 자녀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창출적 정책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출산 전 가구소득과 거주형태의 차이가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창출적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전 소득이전을 통한 정부보조가 출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볼 것임

1) 제1차 기본계획과 구분되는 제2차 기본계획의 특징과 관련하여 이삼식(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배경과 의의, 보건복지포럼, 172, pp.5-10, 참조.

- 2012년 5월 현재 가임기 여성이 사는 가구에 대한 소득이전을 통해 출산력을 높이는 정책은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음.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계층에서는 가구총소득과 출산력이 정(定)의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으나 중·고소득 계층에서는 부(負)의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기존연구에도 불구하고²⁾ 정책시행에 드는 높은 비용과 그 효과 및 효율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가구소득에 따른 차별출산력을 살펴보는 것은 새로운 정책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음
- 직접적 소득이전과는 다르게 거주형태관련 지원 정책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이라는 형태로 시행 중에 있음(마음더하기 정책포털 [http://momplus.mw.go.kr/momplus?act=index])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의 형태에 따라 일정비율을 특별공급하는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음. 주택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에서 1순위(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유아녀[입양포함] 또는 임신 중)가 동일한 경우 해당거주자 → 자녀수 → 추첨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있음
 - 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은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를 띠고 있음. 지원 유형은 크게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근로자서민전세자금, 그리고 저소득가구전세자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원유형에 따라 일정정도의 연간소득이하 시 혜택을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실행방향이 경험적 근거에 비추어 볼 때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거주지까지 같은 순위이면 자녀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도록 설정되어 있으나 보상적 성격으로 인하여 향후의 출산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음
 - 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것 중에 정책적으로 보다 효과성이 높은 곳에 상대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정부 정책 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연결될 것임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11차 자료를 사용하여 가구소득과 거주형태가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임

- 기존의 연구가 가구소득과 출산력간의 혹은 거주형태와 출산력간의 두 변수만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면 본고는 이러한 기술적 논의와 더불어 다양한 혼동변수(confounding variables)를 통제하는 넓은 의미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할 것임³⁾
 - 일례로 여성의 배우자가 있을 때 가구소득이 올라가고, 다른 한편으로 배우자가 있을 때 출산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되새겨 보았을 때 배우자의 유무를 통제하지 않으면 가구소득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이 정의 방향으로 과도하게 추정될 우려가 있음

2) 김두섭(2007), IMF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변화, 한국인구학, 30(1), pp.67-95 (특히 <그림 10>) 참조.

3) 몇몇 논의들은 개인의 생애사적 사건전개에 주목하여 연령을 표준화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음. 일례로, 김태현, 이삼식, 김동희(2006), 인구 및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 - 인구센서스 자료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9(1), pp.1-23.

- 본고는 출산순위에 따른 차별적인 효과에 주목할 것임. 이는 위에서 논의한 주택공급 우선 순위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음. 예를 들어 첫째자녀 출생 시 거주형태가 영향을 미치지만 둘째자녀 출생 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첫째자녀가 없는 가구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향후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라는 추론을 해 볼 수 있음
- 가구소득과 거주형태는 단선적인 관계를 가지기 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얽혀 있기 때문에 각 변수의 독립적인 효과나 조건부적인 효과(conditional effects)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택을 소유하거나, 월세에 비해 전세로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구소득이 거주형태에 선행하는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음. 이 경우 가구소득을 통제하지 않으면 거주형태의 효과가 편의(bias) 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거주형태를 통제하면 가구소득의 효과가 조건부 효과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흔히 생각하는 가구소득의 전체 효과(overall effects)를 파악하지 못함
 - 다른 한편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고에서 측정되지 않은 다른 자산을 소유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가구소득을 높이기 때문에 일면 거주형태는 가구소득에 선행하는 변수라고 볼 수도 있음. 이 경우, 위와 유사한 논리에 의하여, 거주형태를 통제하지 않으면 가구소득의 효과가 편의 될 것이며 가구소득을 통제하면 거주형태의 효과가 조건부 효과로 나타나게 됨
 -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고는 거주형태를 제외하였을 때 가구소득효과와 가구소득을 제외하였을 때 거주형태효과, 이와 더불어 두 변수 모두 고려하였을 때 각 변수의 효과를 살펴볼 것임

2. 통계적 방법론

- 위에서 제시한 연구관심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흔히 콕스모형이라고 불리는 콕스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이용하여 가구소득 및 거주형태에 따른 자녀 출산의 차별적 위험을 살펴볼 것임. 콕스모형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음

$$h(t) = h_0(t) \exp(I^T \beta_1 + O^T \beta_2 + X^T \alpha) \dots \text{〈식 1〉}$$

- 〈식 1〉에서 $h(t)$ 는 시간 t 에서의 위험을 뜻하며 $h_0(t)$ 는 흔히 기본위험(baseline hazards)이라고 불리는 시간 t 에서의 위험을 뜻함. 통계적 분석에 있어 로그우도(log likelihood)를 구할 때 기본위험은 분자와 분모에서 상쇄되기 때문에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함. 위 식에서 I 는 가구소득을, O 는 거주형태를 나타내는 지수변수(indicator variables)들임. 아래에서 논의할 것처럼 가구소득변수와 거주형태변수는 여러 범주를 갖는 범주형 변수이므로 하나 이상의 지수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벡터의 형태로 표현하였음. 통상 벡터는 열벡터를 표현하므로 각 변수에 위첨자로 표현된 T 는 전치(transpose)를 나타냄
- 〈식 1〉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위험이 변수의 값에 따라 비례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임. 즉 혼동변수인 O 와 X 의 값이 동일하다면, I 가 0과 1을 갖는 스칼라(scalar) 지수변수라는 가정 아래, 가구소득이 0의 값을 가질 때는 시간 t 에서의 위험이 $h^0(t) = h_0(t) \exp(0^T \beta_1 + O^T \beta_2 + X^T \alpha)$ 이고 가구소득이 1의 값을 가질 때는 $h^1(t) = h_0(t) \exp(1^T \beta_1 + O^T \beta_2 + X^T \alpha)$ 이기 때문에 $h^1(t)/h^0(t) = \exp(\beta_1)$ 로 나타남

○ 만약 거주형태를 통제하지 않고 가구소득의 효과를 보고자 한다면 <식 1>에서 O를 뺀 것이고, 가구소득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형태의 효과를 보고자 한다면 I를 뺀 것임

- Kim & Kim의 선행연구⁴⁾가 주장하였듯이 첫째자녀 출산에 있어 분석시간은 여성의 연령이 될 것이지만 둘째자녀 출산에 있어 분석시간은 첫째자녀를 출산한 시간부터의 기간이 됨. Kim & Kim(2012)의 연구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자녀출산이 가지는 동태적 성격으로 인하여 출산월에 5개월 혹은 8개월을 뺀 후 자료를 정리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출산월에 이러한 가공을 하지 않았음. 이는 가구소득이나 거주형태와 자녀출산 간에 동태적 성격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구소득의 경우 지난 1년간의 소득을 측정하였기 때문임

3. 자료 및 측정

-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자료 1차에서 11차 자료(1998~2008)를 사용하였음
 - 한국노동패널에서는 다양한 소득관련 변수를 측정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총근로소득, 부동산 소득, 금융소득, 그리고 공적이전소득을 더하여 가구소득을 측정하였음. 한국노동패널에서는 모든 소득을 세후 소득으로 측정하였음. 이렇게 더한 소득에서 사회보장분담금을 뺀 후 가처분소득으로 정의하지만 사회보장분담금에 대한 측정이 7차년도 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음
 - 가구소득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에서 제공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2006년 기준으로 환산하였음. 2006년 기준으로 환산한 이유는 가계동향조사에서 2006년 처음으로 1인가구를 포함하였으며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구소득을 구분하였기 때문임
 -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각 가구원수별로 4분위수를 구분하여 4개의 범주를 가진 가구소득변수를 구성하였음. 예를 들어 2인가구의 경우 하위부터 25%, 50%, 75%에 있는 가구소득을 구하여 0~25%미만의 가구소득의 경우 한 범주를 할당하고 25% 이상~50% 미만을 다른 범주로 할당하는 등의 방식으로 4개의 범주를 나누었음.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0~25%에 있는 가구의 여성을 기본범주 (baseline category)로 설정한 후 지수변수를 구성하였음.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월별가구소득을 조사하였으나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지난 1년간의 소득을 측정하였으므로 노동패널의 연간 수치를 12로 나누어 월간 가구소득변수를 구하였음
 - 1인가구나 보다 많은 수의 가구원을 포함하는 가구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변수를 구성하였으며 본고에서는 6인가구까지만 고려하였는데 이는 7인가구 이상의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4분위수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임

4) Kim, H. S., & Kim, J. Y.(2012).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Fertility, Pp. 33-62, in International Workshop on Linkage of Low Fertility to Socio-Economic Environmen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거주형태는 월세, 전세, 자가소유, 그리고 여타의 형태로 구분하였으며 월세를 기본범주로 다른 범주를 나타내는 지수변수를 구성하였음
- 보다 강건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혼동변수를 통제하였음
 - 여성의 어머니 학력, 여성의 학력, 배우자 유무, 배우자 어머니의 학력, 배우자의 학력, 여성의 생년 코호트, 거주지역, 총가구원수, 할머니(친할머니, 외할머니 모두 포함)의 가구 내 동거여부
 - 모든 변수는 범주형 변수로 취급하였으며 한 변수에 결측된 값이 있는 경우 독립된 범주를 할당하여 지수변수로 변환하였음
- 기존연구와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15세 이상 50세 미만의 여성만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음. 셋째자녀 이상에서 출산 사례가 적기 때문에 첫째자녀와 둘째자녀의 출산에만 분석을 국한하였음

4. 연구결과

□ 기술통계

- 다음의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기술통계를 보여주고 있음
- <표 1>에서 N은 자료에 관측된 여성의 총수를 의미함. 예를 들어 첫째자녀 출산위험이 있었던 여성의 총수는 2,990명임. 조출산율은 사건수에서 관측달수를 나눈 후 12*25를 곱하여 구한 것임. 이 수치는 한 여성이 동일한 출산위험을 15세에서 49세까지 경험하였을 때 얼마나 많은 자녀를 출산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임⁵⁾

<표 1> 자료의 기술통계

구분		첫째자녀 (N=2990) ¹⁾			둘째자녀 (N=1532) ¹⁾		
		관측달수	사건수	조출산율 ²⁾	관측달수	사건수	조출산율 ²⁾
전체		1,536,868	696	1.36	57,596	677	3.53
가구소득	1분위	56,237	150	0.80	20,356	256	3.77
	2분위	33,874	161	1.43	15,784	206	3.92
	3분위	30,407	198	1.95	11,381	116	3.06
	4분위	33,350	187	1.68	10,075	99	2.95
거주형태	월세	12,841	44	1.03	5,497	50	2.73
	전세	35,531	360	3.04	24,059	311	3.88
	자가	100,623	257	0.77	25,613	274	3.21
	기타	4,873	35	2.15	2,427	42	5.19

주: 1) N은 한번이라도 관측된 여성의 총수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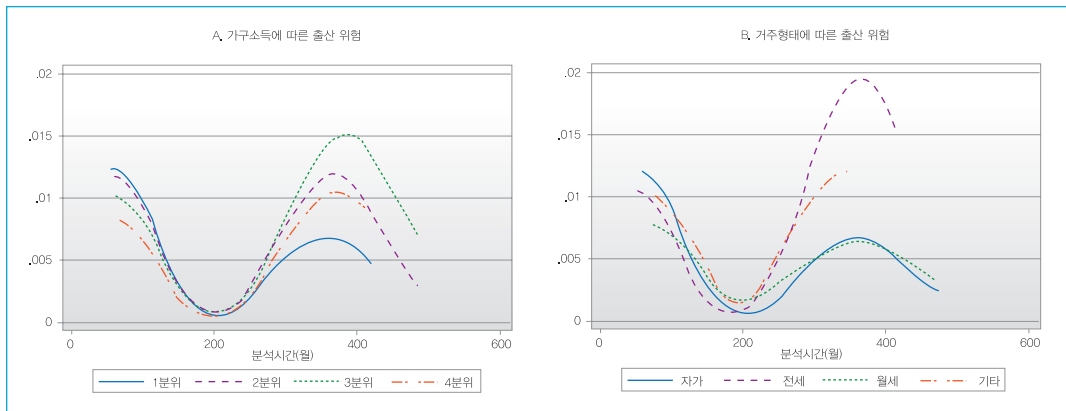
2) 조출산율은 사건수를 관측달수로 나눈 후 12*25를 곱하여 15세부터 49세까지의 출산율을 구한 것임. 보다 상세한 설명은 본문 참조

5) 보다 상세한 설명은 앞서 인용한 Kim & Kim (2012) 참조.

- 소득분위별 관측달수에서 1분위를 제외하면 각 자녀출산순위별로 유사한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가계동향조사와 본고의 자료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임. 1분위에서 보다 많은 관측달수가 기록된 이유는 한국노동패널이 가구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하였고 15세 이상이 되는 분가가구원을 추적하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과대표집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표 1>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첫째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지다 가장 높은 소득에서는 약간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줌. 이와는 다르게 둘째자녀의 경우 저소득층에서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3분위나 4분위 가구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음
- 거주형태별로 보면 첫째나 둘째 자녀 출산에 있어 전세로 사는 가구의 출산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음

○ 다음의 [그림 1]은 주요 설명변수별 위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X축에서 200월 이하의 곡선은 둘째자녀 출산 위험을 나타내고 그 이상의 곡선은 첫째자녀 출산의 위험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1] 설명변수별 출산위험의 차이



주: Y-축은 위험(Hazards)을 나타냄

- <패널 A>를 보면 가구소득 1분위에 위치한 여성의 경우 첫째자녀 출산위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분위에 있는 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둘째자녀 출산위험과 관련하여 1분위에 위치한 여성이 가장 높은 위험을 보인 반면 4분위에 있는 여성이 가장 낮은 위험을 보이고 있음. 둘째자녀 출산위험은 첫째자녀 출산위험에 비해 상대적 차이가 적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음
 - <패널 B>를 살펴보면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첫째자녀 출산위험이 가장 높으며 자가소유와 월세에 거주하는 여성이 유사하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가구소득에 따른 위험과 비슷하게 거주형태의 차이는 첫째자녀 출산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둘째자녀 출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지금까지의 논의는 아무런 혼동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편의된 추정량일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여타의 혼동변수를 통제한 후 각 변수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제 그 수치를 제시하도록 하겠음

□ 통계모형 추정결과

- <표 2>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의한 모형추정결과를 보여줌. 자녀출산순위별로 세 가지 모형을 추정하였는데, 1) 아무런 혼동변수를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 가구소득효과와 거주형태 효과를 추정한 모형, 2) 모든 혼동변수 통제 후에 각 변수의 효과를 추정한 모형, 마지막으로 3) 모든 혼동변수를 통제하고 가구소득변수와 거주형태변수를 함께 넣어 추정한 모형에서 얻은 결과가 제시되었음
- 우선 가구소득이 첫째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혼동변수를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 가구소득 2분위에 있는 여성은 1분위에 있는 여성에 비해 출산위험이 $exp(0.362)=1.436$ 배인 것으로 나타났음. 다시 말하면 약 43.6%의 출산위험이 증가하는 것임. 하지만 혼동변수를 통제할 경우 가구소득의 영향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흥미롭게도 혼동변수를 통제하면 가구소득 4분위 여성의 경우 가장 소득이 적은 계층에 비해 출산위험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마지막으로 혼동변수에 더하여 거주형태를 통제하였을 경우의 계수들이 혼동변수만을 통제하였을 때의 계수들과 비교하여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표 2> 통계적 분석 결과

구분	변수	혼동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모형 ¹⁾		혼동변수 통제 모형 ²⁾		혼동변수 통제 모형 ³⁾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첫째자녀 출산								
가구소득	2분위	0.362 **	(0.116)	0.089	(0.125)	0.081	(0.125)	
	3분위	0.475 ***	(0.112)	0.117	(0.121)	0.104	(0.122)	
	4분위	0.170	(0.115)	-0.130	(0.127)	-0.136	(0.127)	
거주형태	전세		0.838 ***	(0.174)	0.422 *	(0.184)	0.413 *	(0.186)
	자가		-0.256	(0.177)	0.323	(0.189)	0.323	(0.192)
	기타		0.666 **	(0.242)	0.316	(0.255)	0.292	(0.255)
둘째자녀 출산								
가구소득	2분위	-0.013	(0.094)	-0.033	(0.096)	-0.034	(0.097)	
	3분위	-0.148	(0.113)	-0.169	(0.121)	-0.175	(0.121)	
	4분위	-0.205	(0.118)	-0.176	(0.130)	-0.183	(0.131)	
거주형태	전세		0.144	(0.161)	0.124	(0.163)	0.131	(0.162)
	자가		0.165	(0.162)	0.141	(0.165)	0.164	(0.164)
	기타		0.290	(0.223)	0.275	(0.221)	0.280	(0.221)

주: P-value: * <0.05, ** <0.01, *** <0.001, 1) 아무런 혼동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모형, 2) 모든 혼동변수를 통제하였으나 가구소득이나 거주형태 중 한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모형, 3) 모든 혼동변수를 통제하고 가구소득과 거주형태를 함께 추정된 모형

- 거주형태가 첫째자녀 출산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월세에 거주하는 여성에 비해 전세에 거주하는 여성의 출산위험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혼동변수를 통제할 경우 그 영향이 대폭 줄어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에 사는 여성의 출산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이는 가구소득을 통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하지만 혼동변수를 통제할 경우 여타의 범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둘째자녀 출산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아래쪽 계수들을 보면 모든 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또한 여러 모형별로 계수의 값이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음. 이러한 결과는 가구소득이나 거주형태가 둘째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앞서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1) 가구소득이 첫째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2) 월세에 비해 전세에 거주하는 여성의 첫째자녀 출산위험이 높게 나타났으나, 3) 가구소득이나 거주형태 모두 둘째자녀 출산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저출산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음
 - 출산 전 가구소득의 이전효과는, 그런 정책이 입안된다고 하더라도 매우 미미할 것으로 생각됨
 - 주택공급 및 주택자금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월세에 거주하는 여성에게 전세로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월세에서 바로 자가소유로 넘어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되새겨본다면 전세 자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공급을 전세의 형태로 제공하는 정책을 강도 높게 시행하는 것이 저출산 현상을, 극복까지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임
 - 예를 들어, 현행 임대주택제도 하에서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고, 임대보증금을 낮추거나 저리로 융자해 주는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가구소득이나 거주형태가 둘째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경험적 증거에 기반하여 자녀를 이미 낳은 부부에 대해 정책지원을 하는 보상적 정책과 더불어 자녀를 아직 낳지 않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넓히는 창출적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됨. 물론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에는 정책수요대상의 범위확정과 사회적 수용성의 증대와 같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김현식(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문의(02-380-8390)